

##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주요 법안 처리

- ①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반도체경쟁력강화법’**
- ② 자원순환 범위 확대와 순환경제 목표 설정·통계 조사 등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촉진시키는 **‘순환경제법’**
- ③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로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리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법’**
- ④ 스톡킹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 근거를 마련한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 ⑤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통해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국민의 공공요금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한전경영정상화법’**

□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제4014차) 본회의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지키는 우리당 민생안정 주요 법안 5건을 처리했습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략산업 분야에 전문인력양성과 체계 재정비,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인·허가 과정 투명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규제개혁의 초석을 다질 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신순환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자원순환기본법’**을 처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원순환 범위를 확대하고 순환경제 목표 등을 설정함으로써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기본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리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보다 나은 삶과 균등한 기회를 실현하여, 전라북도의 희망찬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아울러 스토킹 실태조사·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인상되어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공공요금 인상까지 이어지는 위협에 처했습니다.
  - 이에 '한국전력공사법'은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現 자본금 및 적립금 합산액의 2배)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배로 확대하고, 긴급한 경우 산업부장관 승인 및 국회 보고로 6배까지 초과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12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끝까지 민생경제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증대시키는 입법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년에도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각오와 함께,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12. 28.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성 환

번호	법안명	주요내용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반도체경쟁력강화법)	전략산업 등의 전문인력양성과 체계 재정비,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인·허가 과정의 투명화 등 근거 마련
2	자원순환기본법  (순환경제법)	자원순환 범위 확대. 순환경제목표 설정·통계조사 등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근거 마련
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스토킹 실태조사·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마련
5	한국전력공사법  (한전경영정상화법)  ※ 한국전력공사법은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은 아니라 현안 법안이라 포함시켰음.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국전력공사 사채 발행한도(現 자본금 및 적립금 합산액의 2배)를 5배(산업부 승인으로 6배)로 상향. 산업부 승인에 따른 초과 발행 시 국회 보고